

2010년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총노동 전선으로 단결하자!
-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이 민주노총의 통합적 지도력 구축에 나서자!
- 무원칙한 선거 연합을 지양하고 전국적 대중 투쟁을 책임질 지도부를 구축하자!

사회진보연대 2009년 12월 31일

○ 민주노총의 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나 징후가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투쟁역량 위축, 사회적 영향력 감소가 대표적 사례다. 민주노총이 처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계급성 또는 계급적 대표성의 위기로 집약된다. 즉 노동조합 활동이 협소한 의미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그치고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의 권리를 대변하거나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 위기의 효과는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한다. 정권과 자본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맹공을 펼치고, 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노동자 대중조차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동자 집단 간 격차 확대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적 신자유주의 전략의 귀결이다. 따라서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는 것은 명백히 정권과 자본의 위선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정액임금 인상 또는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노동자 내부 격차 축소, 경제의 금융화나 한국 재벌의 하청착취구조에 대한 비판과 규제는 기존 노동조합이 자임해야 할 과제다.

○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을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조업(특히 자동차)과 공공부문 대사업장의 ‘강성’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을 강행하여 노동조합의 활동기반을 파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노조 관계법을 더 개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와 직무급 성과급 확산하여 노동신축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을 빌미로 공무원노조, 교원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이로써 금속, 공공, 공무원, 교원노조 등 민주노총 내 거대 산별노조(연맹)를 마비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법치주의, 불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고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억제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순치하기 위한 시도는 항상 존재했으나, 현재는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주체적 조건이나 이데올로기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다. 2010년은 민주노총 역사에서 매우 흑독한 시련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노동조합운동이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이제 활동가 대부분이 인식한다. 모든 운동 집단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이념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여러 정파들이 노동조합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서로 부정적 경쟁을 펼치는 퇴행적 집단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 혹자는 정파의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한다고 비판하고, 혹자는 ‘정파다운 정파, 제대로 된 정파’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정파는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큰 울타리를 함께 지키면서 비판과 협력을 추구하는 운동 세력이라는 정신을 공유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신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노동

자 대중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민주노총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민주노총 선거 이후 새로운 집행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이처럼 활동가 집단의 신뢰, 노동자 대중의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중장기적 운동전망과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고, 민주노총의 모든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간 토론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노총이 이대로 가다간 이명박 정부의 힘에 계속 굴복하며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분해, 와해할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민주노조 운동세력은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필사의 각오를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 선거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엄중한 과제를 예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자운동을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재건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지도부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민주노총이 노정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실천의 동요를 극복하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무력화와 극단적 노동 신축화를 막아내기 위한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자. 사회진보연대가 제시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재건과 혁신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혁신과 재건의 과제' 첨부)

민주노총 혁신과 재건의 과제

1. ‘실리주의’를 넘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화운동으로!

○ 노동조합이 처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는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사명이란 무엇이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 조직화의 중심이다.

○ 노동조합의 직접적 목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투쟁에서 즉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자본의 끊임없는 침해를 격퇴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임금노동과 자본의 지배를 위한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노동해방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나아가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지지해야 하고, 노동조합 자신이 노동자계급의 선도적 투사이자 대표자라고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인식과 행동을 통해 노동조합 대열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결집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이 협소하고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단체라는 사실을 광범위한 노동자계급이 확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역사적 사명을 다시금 숙고하며 위기에 처한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을 재설계해야 한다.

○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는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역사이자 분할과 경쟁의 역사였다. 세계 경제위기가 격화되면서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 전략을 통해 자본가와 경영자의 권력을 복원하고 노동자 간 분할과 경쟁을 강요하기 위한 공세에 나섰다. 그 결과 광범위한 실업, 반실업 노동자 대증이 창출되고 그들의 고통을 대가로 노동신축화 공세가 가속화되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근본적 임무를 상기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대중은 집단적 힘을 지닌 사회세력이 아닌 파편화된 집단들로 분해되어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할 것이다. 노동자 대중이 사회세력으로 재형성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이념과 노동자 대중이 처해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수적 매개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이념과 현실인식을 획득하기 위한 장이자 투쟁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 게다가 세계경제는 장기침체나 이차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 금융자본에 막대한 특혜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흥국과 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부실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금융부실이 재폭발하고 이차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상승 경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선도산업과 3차 산업혁명이 출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세계경제의 위기 폭발은 노동자 대중에게 상상하기 힘든 파괴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노동자운동이 대안세계를 위한 이념과 운동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웅변한다.

○ 20세기 말에 출현한 대안세계화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대안을 찾기 위해 세계적으로 펼쳐진 다양한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노력이 결집된 것이었다. 대안세계화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첨병 역할을 하는 WTO나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해체하거나 전환하고 민중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적-지역적 기구들을 창설하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자본을 통제하며, 제3세계 외채탕감을 통해 새로운 민중적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자연자원의 상품화와 사유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1세기 초에 폭발한 세계 금융위기는 대안세계화운동이 던진 문제제기와 요구의 정

당성을 반증한다. 노동자운동은 세계적 규모에서 전개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국제자본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을 창출하거나 긴밀히 결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총노동전선의 구축과 지역운동의 강화

○ 경제위기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동결’을 강조하는 한편, 고용위기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개악하여 전면적인 노동신축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 때 지배세력들의 입장에서 가장 걸림돌은 노동자이 단결하고 집단적인 항의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혹은 힘 있는 노조로서 상징을 지니고 있는) 노조를 깨거나 순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대중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그 위에서 노동재조직화신축화를 진행하려고 있다. 화물연대 열사투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저지투쟁, 철도의 공공선진화 분쇄 투쟁을 지배세력들이 초 강경자세로 탄압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지난 10년간 경제위기 아래에서도 정권과의 코포타티즘적인 타협이 가능하다는 미망에 빠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소홀히 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운동을 개혁하기 위해 산별연맹을 강화하고 총연맹의 위상을 상대화시켜왔다. 총연맹은 제도개선투쟁, 산별연맹은 임단협투쟁·조직화에 집중해왔던 지난날의 조직운영 및 투쟁과정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그에 따라 반신자유주의 총노동전선이 유실되고, 임단협투쟁은 분권화되면서 노동자대중의 전국적·계급적 단결은 지체된다. 현 시기 민주노총이 이명박정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민주노총운동의 오류가 야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임단협투쟁을 분권화하면서 임단협의 적용범위를 단위기업·정규직 노동자들 안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 한편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은 기층연대운동—지역운동을 강화하는 것보다 상층연대에 치중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연대운동전선은 급격히 우경화되고 만다. (정치세력화전략의 실패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정책적 제도개선투쟁이 우선시 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역과 현장차원에서 연대운동은 축소되었고, 노동조합운동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경로는 점점 사라졌다.

○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연맹을 강화하고, 총연맹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대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개별사업장 단위나 심지어는 산별단위로 분산되었을 때, 각개격과 당했던 과거의 기억을 환기해야 한다. 그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총연맹을 중심으로 노동자대중의 노동권 옹호를 위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개별 노조 차원에서 될 일도 아니다. 금융통제,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금지하는 것, G20에 맞서는 운동 등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운동에서 총연맹이 중심에 서야 한다.

○ 또한 총연맹과 (핵심적인) 산별노조의 (시기집중 등) 공동기획과 공동투쟁을 강화하면서 산별연맹(노조) 별로 분산된 임단협 투쟁의 집중성을 높여야 한다. 노조 임단협 투쟁의 영향을 축소하고, 노동조합 전체의 임단협을 분산시킴으로써 고용 및 임금격차를 유도하여 노동자를 분할 통치하려는 지배세력들의 시도에 맞서 계급적 단결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총연맹 강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을 재건하고, 활동가 주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산업별업종별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투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연대운동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노동조합의 정세적 운동을 빠르게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으로서 기층조직화의 공간으로서 지역연대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총연맹 지역본부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 따라서, 첫째, 경제위기 손실을 전가하려는 이명박정권에 맞서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연맹에 모든 정책적·조직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고, 총연맹은 그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총연맹은 반신자유주의 운동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에서 중심에 서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사수'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 노동자민중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민주노조사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 시기 민주노조사수투쟁이 '정규직 살리기'라는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것은 노동자대중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폭로하면서, 전체 민중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임단협에서 노동자대중의 전국적·계급적 단결을 드높일 수 있도록 총연맹과 (핵심적인) 산별노조 사이에서 공동투쟁 기획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임단협이 포괄하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투쟁(예컨대 단협적용확대, 시기집중 등)을 기획해야 하며,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조건 하한선을 결정하는 투쟁에서 총연맹이 전체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넷째, 지역연대운동의 구심으로서, 그리고 총연맹 활동의 집행기구로서 지역본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노조 조직화, 정세대응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연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본와 산별지역본부/지부와 통합적 운영 및 공동기획·공동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연맹 지역본부에 대한 인력, 제정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3.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요구의 전면화

○ 세계경제는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중소형 은행 부도), 약간 회복양상을 보이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의 반전 가능성, 유럽 몇 나라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문제, 유럽은행들의 대규모 부실, 중국의 과잉투자 및 거품 논란 등이 이런 불안을 낳고 있는 요소이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당분간 세계경제가 일정한 회복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미국 헤게모니 아래에서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극복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경향이 역전될 정도로 산업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약간의 이윤율 증대를 가져왔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도 철회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또한 동아시아 수출달러의 미국으로의 환류와 미국의 대외 부채 증대라는 국제적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새로운 생산력으로 무장한 헤게모니가 미국을 대체해서 등장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미약한 회복 및 뒤이은 '더블딥',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에서 제출되고 있는 2010년대 미국 자본주의(및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종적 위기 등은 이런 사정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는 원화가치 하락,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은 대규모 경기부양 및 성장, 재정지출 증대 등을 통해 심각한 위기 국면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부담은 노동자에게 손쉽게 전가되었고 대

외변수의 불안정성은 한국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갔다. 우선 경제위기는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은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증충화된 하청구조와 대규모 비정규직 고용은 경제위기에 고용신축성을 극단화하였다. 그 결과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또한 장시간 노동(연장근로나 특근)을 통해 낮은 통상임금을 보전해 오고 있는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작업량-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심각한 임금하락을 경험하였다.

○ 한국경제는 이번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환율 급등을 나타냈다. 경제위기 초기에는 원유를 비롯한 1차산품 가격마저 상승해 수입물가 폭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태는 한국경제가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한국경제는 97/9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리고 그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해 오면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출입에 취약한 경제가 되어 버렸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입의 변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2008년과 2009년의 자본수지 동향이다. 2008년 1월에서 10월 사이 증권투자(주식, 채권) 자금은 112억달러가 유출되었는데 2009년 같은 기간에 463억달러 유입으로 변화하였다. 물론 이런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재유입에는 일정한 실물적 근거가 있다. 그것은 환율인상(원화가치 절하) 및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커졌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화나 달러를 빌려 한국의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면(엔캐리 트레이드나 달러캐리트레이드), 원화가치 상승과 주가 상승의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대규모 유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출과 유입의 규모는 과도하다. 당연히 이에 따른 환율변동도 과도하다. 과도한 유출과정에서 진행된 환율폭등도 과도하고, 유입과정에서의 급격한 환율하락도 과도하다. 당연히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입은 언제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수준을 넘어선 환율의 상승,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둔화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든지 줄어들거나 적자로 반전될 수 있어서 자본유출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고, 경제위기가 재도래할 경우 그 양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제출될 수 있는 노동자운동 요구는 무엇일까? 미약한 회복과 뒤이은 더블딕을 예상한다면 고용문제 해소는 요원할 것이고, 금융적 불안정성은 또 다시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는 노동권과 금융화에 대한 요구를 제출해 보기로 하자.

○ 우선 노동권과 관련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당장의 적자 기업에서 과거 누적 흑자를 활용한 고용유지 방안, 공공부분 인력 구조조정 중단, 부도 가능 사업장에서 정부의 지원(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통한 고용유지, (한시적인) 해고 조항 적용 유예 혹은 (한시적인) 해고 금지법(이데올로기 투쟁의 일환으로 ‘해고는 안된다’는 문체의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투쟁 차원을 넘어 고용문제가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제도적 장치 없이는 매 고용사안마다 대응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투쟁에 지쳐 연대도 잘 안되고 개별투쟁들이 고립 속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양보교섭도 일반화할 수 있다.)을 쟁취하자. 다음으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특별상여금의 기본급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산별노조 내 임금격차 해소,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적절한 수준의 정액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쟁취하자.

○ 금융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금융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위기에 빠진 자본 그 자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화와 관련된 요구로 상업은행들의 투자업무 제한 및 중단, 겸업화 금지, 신용의 증권화 금지, 자통법 반대, 금산분리 완화 반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 및 금융감독 권한 부여, 외환거래세 도입, 외환거래자유화 제한, 자본이득세, 초민족적(금융)자본의 인수합병 참여 금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로는 각종 구조조정 기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 확보, 소

유자 청산-지배구조 개선-(산업)구조재편을 전제로 한 규제금융 제공을 고려한다.

4. ‘조직형식주의’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확대, 강화하는 산별노조의 혁신과 강화

○ 민주노총은 산하 조합원의 3/4 이상이 산별노조 소속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의 목표로 제기해왔던 산별중앙교섭의 제도화, 기업을 넘어 산업 차원의 단결의 강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의 확대·강화 등 과제들이 모두 난관에 처해 있다. 오히려 산별연맹 시절보다 현장의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실리적, 도구적 인식이 확대·강화되었다. 또한 산별노조의 건설과정은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으로서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지역운동의 구심으로서 총연맹 지역본부의 산별지역본부·지부에 대한 관장력이 현격히 약화되었다.

○ ‘산별완성’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조직형식적인 산별건설에 대해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그 동안 산별노조 건설과정은 독일, 스웨덴과 같은 중북부 유럽국가의 산별노조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조직형식’과 ‘교섭구조’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합의와 현장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일정을 박아 놓고 조직건설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조직형식적인 산별건설 과정은 ‘기업지부’를 해소하면 ‘기업별 의식’이 극복할 수 있다는 사고로 극단화되었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조직화도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왜곡 선전하거나, 단순히 ‘조직이 커지면 자기 사업장의 투쟁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실리주의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산별노조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조를 넘어 초기업적 단결을 형성하고, 공동투쟁으로 노동자간 격차를 축소하자는 산별노조 건설의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직형식주의’를 넘어 조합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산별노조 혁신과 강화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산별노조의 혁신과 강화는 민주노조 총단결 혹은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으로서 민주노총 강화와 지역운동의 구심으로서 지역본부·지구협의 강화라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산별 중앙이 총연맹 차원의 총노동전선 구축에 복무할 수 있도록 공동기획과 투쟁의 집중, 이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본부·지구협을 중심으로 산별지역본부·지역지부와와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산업, 업종, 기업규모 등 각종 차이를 넘어 실질적이고 계급적인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 금속노조의 경우 구체적인 산업의 구조, 정권과 자본의 정책, 조합원의 의식과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업, 업종 차원의 공동투쟁, 원청-하청 간의 공동투쟁,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는 가장 관건적이다. 또한 이미 중앙교섭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노조가 투쟁으로 자본을 강제하여 교섭구조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교섭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한축으로는 주요 완성차지부를 중심으로 원-하청의 공동요구와 공동투쟁의 모범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다른 한축으로는 형식화된 지부 집단교섭에 대한 중앙 차원의 투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지부의 해소와 관련해서도 무리한 재편으로 인한 조직 갈등을 확대하기 보다는 공동투쟁을 통해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완성차지부와와의 공동투쟁 기획을 통해 산별노조의 현실적 필요성을 조합원들에게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1사 1조직’의 경우도 타타대우상용차, 캐피코, 동원금속 등 모범사례와 기아자동차지부에서의 조직 갈등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형적 조직 확대 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확대, 강화하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2006년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과도적 조직으로 출범한 공공노조/운수노조의 경우 운수노조가 통합산별건설을 결의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과도조직으로서 공공노조도 공공기관(전국단위 기업지부), 단위 기업지부, 초업종지역지부 간의 조건과 입장의 차이로 인해 내부적 조직재편을 둘러싼 논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산별노조 건설이 불투명할 경우, 과도조직으로서의 공공노조 또한 존립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실질적인 통합산별노조 건설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공노조는 산별교섭과 관련해서도 한축으로는 공공기관(전국네트워크 대사업장)의 대정부 교섭이 관건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섭거부라는 장벽에 막혀 공동투쟁을 통한 돌파가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지부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과 집단교섭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 교섭에 대부분의 활동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맞서 공동투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지역지부의 경우 조직화 과정에서부터 집단교섭을 염두에 두고 조직하거나 현장의 교섭역량을 키워내는 등 다각도로 과도한 교섭의 문제를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공공노조의 역량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선진화에 맞선 투쟁과 지역지부의 강화를 위해서는 총연맹, 총연맹 지역본부-지구협과의 긴밀한 공동기획과 공동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공노조 내부 조직체계 재편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지부와 지역지부 간의 논쟁구도 방식으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 한축으로는 공공기관지부에 대한 중앙의 사업을 강화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지역본부' 형식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질적으로 지역지부를 강화하고 지역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지부의 긴밀한 논의와 실천계획의 마련이 중요하다.

5.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운동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 분당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과 정당운동을 둘러싼 정파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민주노총의 통합력이 저하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무기력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층 간부들과 현장 조합원들의 폭넓은 동의에 기반을 둔 현실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배계급의 압도적인 공세 속에서 민주노조운동과 정당운동 공히 생사의 기로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단결은 중차대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 기존 정치세력화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분열이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운동을 더욱 큰 위기에 빠지게 한 계기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미 진보정당의 분화 이전부터 정치세력화 운동에 내재된 모순이 폭발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정치방침에 근거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위기가 고스란히 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경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민주노총과 대중운동의 혁신 및 정치적 재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치협상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에 주로 의존했다. 특히나 2004년 총선에서 10명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의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당의 인력과 재정의 배치가 의정지원 쪽에 심하게 쏠려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의회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들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경향을 강화했다. 또한 당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당의 교육프로그램은 부재했으며, 국회 의원과 유명 인사들의 강좌에 머물렀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운동이 허구적 코퍼러티즘적과 노동자 분할 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운동 전략을 통해 대중운동을 재건하기보다는, 87년 투쟁의 성과에 기대어 제도화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의회주의를 추구한 것이 기존 정치세력화의 문제점이었다.

○ 제2의 정치세력화, 정당 간 통합을 넘어 사회운동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제2의 정치세력화는 현존하는 정당들 간의 통합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정당과 노조의 관계와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운동이 허구적 코퍼러티즘과 노동자 분할 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운동 전략을 통해 대중운동을 재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한 수세적 반응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민주노총이 위기에 빠진 것이 단지 '의회에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민주노총운동의 혁신을 위한 포괄적 과제를 은폐하는 알리바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부정적 수렴점'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부정적 수렴점마저 극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 최소한의 공동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노동자운동 내 모든 세력은 정당의 분열이 민주노총의 분열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객관적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총 운동, 특히 선거를 둘러싼 정파들 간의 갈등을 축소하고 민주노총의 개조와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역으로 정당들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번 6기 집행부 선거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인 바, 정파들 간의 허구적 대립을 지양하고 민주노총 내부 혁신을 통해 공동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자.

다른 한편으로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을 포함한 대중운동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은 사회운동의 성과를 소진시키는 방식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세력관계의 역전을 촉진하는 정당, 출세주의나 당의 우경화와 직결되는 조급한 집권전략에 몰두하기보다는 당의 근본이 되는 대중운동을 재건,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사회운동정당으로의 변모를 추동하면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 공조하여 선거와 대중투쟁에서 통합적인 대응을 시도할 수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시기 노동권에 관한 대중적 요구를 집약하여 진보정당과 공동으로 제도적 대안을 발의하고, 선거 전후 대중투쟁과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의 실질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미 현실에서 '사문화'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지나 폐지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노총이 전개해야 할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총괄적 방향과 경로를 제시하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준 등 정당추진세력의 정치활동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 방침'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스스로 진보정당에 대한 인적 물적 동원으로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수동화한 관행을 탈피함으로써 선거 대응에 경도된 정당운동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일상적인 학습 선진 조직을 통해 대안사회에 대한 이념과 전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정치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민주노총은 장기적으로 전선재편을 포함하는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

6.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 半실업자—취업자의 갈등을 기본 축으로 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분할을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서 기인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현 단계 미조직비정규직 운동에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운동의 재건이라는 관점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절대적 부족이지, (관료화 혹은 정규직 대공장 운동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과잉이 아니다. 더 많은 노동조합운동의 재건과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주노총 운동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비정규직 노동조합운동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노동조합 운동의 이념을 비정규직 문제로만 한정짓고, 여기에만 매달려 비정규직 문제를 갖대로 노동자운동을 편가르는 식으로 운동을 전개해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운동을 조직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운동은 전체노동자운동 혁신과 노동조합운동의 재건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을 발본적으로 쇄신하고, 쇄신된 이념을 노동자 대중의 이념으로 형성하는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그리하여 오늘날 지배세력들이 임금과 고용을 매개로 노동자의 분할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맞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주체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을 만들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조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노동자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보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운동으로서 비정규직 운동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직사업을 매개로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주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별 지역지부(지역일반노조) 강화를 목표로 지역적 차원에서 총연맹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지역지부(본부), 정치노동사회 단체들이 서로 주체가 되어 민주노조운동을 조직·확대하려는 공동의 기획이 확산되어야 한다.

○ 수없이 강조했지만 이념 없는 조직화사업은 노동조합운동을 아래로부터 붕괴시킬 뿐이다. 이념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 내에서 조직화사업과 교육사업이 상호유기성을 반드시 갖추어나가야 한다. 이념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차원의 조직화 사업이 지역차원의 교육사업과 함께 서로 교차해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이념을 불어넣기 위한 단체들의 노력들이 노조 재건사업과 함께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 한편, 비정규직·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이 사이에서 공동의 요구에 근거한 노동권 쟁취 투쟁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기본급을 정액으로 인상시키려는 투쟁,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려는 투쟁을 실질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또한 총고용 쟁취 및 해고 및 계약해지를 제한하려는 공동의 고용안정 투쟁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동의 요구로서, 노동 재조직화, 노동 신축화에 맞서는 운동, 노동강도를 완화하려는 투쟁들이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

7.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과 여성사업 강화

○ 민주노총이 노동해방, 대안세계를 지향하는 이념을 확립하고 노동자 내부의 단결 강화라는 과제를 이루는 데 페미니

증적 혁신은 필수적인 요소다.

○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의 책임자이자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서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착취를 종식시키고 동시에 여성억압을 구조화한 가족관계와 남녀 관계를 변혁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향한 투쟁의 구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성해방의 이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 분리직군, 무기계약,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연근무제도 등 최근 여성들의 일자리를 둘러싼 다양한 조치들은 노동 신축화 경향을 가속시키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다. 그 일차적 대상은 가장 조직이 안 되어 있고 힘이 없는 여성노동자들이지만, 결국 전체 노동자가 대상이다. 비정규직 확대, 임금과 노동조건에서의 노동자 집단 간 격차의 확대라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신축화에 맞서고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여성들을 유연한 저임금 노동에 고착시키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여성의 가족 내 역할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가족을 매개로 한 성별분업과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여성노동권을 제약하는 고유한 구조 속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일반의 문제로 사고한다.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고 현재 가족의 성별분업 구조와 여성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 여성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서는 투쟁은 민주노총의 중심 과제가 될 수도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운동의 일주체로 설 수도 없다. 또한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에게 모성과 재생산 노동을 강요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공세에 대응할 수 없다. 나아가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해야 하는 민주노총의 과제를 이룰 수도 없다.

○ 지난해 발생한 민주노총 임원의 성폭력 사건과 그 처리 과정은 민주노총 내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에게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민주노총의 현실을 심각하게 평가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노총 임원이 여성조합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한 사건은 그동안 펼쳐진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성폭력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율성을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민주노총 내에서 생겨났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었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처리를 중심으로 펼쳐져 왔던 반성폭력 운동이 최소한 사건 처리 원칙과 방식조차 조직에 안착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성폭력과 여성 차별적·배제적인 조직 문화는 여성들이 민주노총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을 지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갈리지 않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발본적인 여성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 내에 성폭력과 그 바탕에 놓인 여성 차별, 억압, 배제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바꿔야 한다는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은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민주노총 운동을 페미니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사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첫째, 여성노동자 조직화. 민주노총을 페미니즘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주체로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는 언제나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여성의 조직률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이를 높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더불어 미조직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라는 측면에서도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은 배가된다.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대다수는 노동조건과 임금이 매우 열악하고,

해고나 여타의 권리 침해에 대응조차 할 수 없거나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이 이런 무권리 상태의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방어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신의 노동과 삶에 의미를 가지는 조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과정은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담당자라는 이데올로기와 현실이 여성을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여성권과 페미니즘을 민주노총의 과제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실천적으로 제기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미 조직된 여성조합원과 새롭게 조직되는 여성노동자들을 민주노총 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해방운동의 역사, 페미니즘 이론, 여성의 권리와 같은 페미니즘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자운동의 역사,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 활동, 정세를 포괄하는 교육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과 정치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민주노총의 여성요구: 여성의 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민주노총은 여성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해 사회적인 여성억압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여성관련 요구가 강제성을 가지는 조항으로 사업화되는 경우는 기업별, 산별 수준의 여성 관련 단체협약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 관련 단체협약은 가장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치부된다. 또한 실제 여성노동자 대다수는 해고 위협과 같은 고용상의 실제조건 때문에 단체협약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장 수준의 요구를 넘어서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일반적 현실을 반영한 요구안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제시하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여성관련 정책들을 사안별로 유불리를 따져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라는 일관된 방향에서, 남녀 모든 조합원의 작업장, 가족, 노조의 활동과 구조, 그 안에서 여성들의 현실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3) 여성들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힘: 여성위원회

현재 여성사업 담당 부문, 여성 간부들의 사업 단위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위원회를 여성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여성위원회는 사회적인 여성억압의 문제가 제기될 때, 또 이러한 문제가 노조 내에서 표출됐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전체 민주노총 운동의 과제로 제시하는 기구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위원회는 여성조합원과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여성에 대한 억압과 배제, 차별을 감축시키기 위한 문화 혁신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를 넘어서 여성 차별적, 억압적 구조와 문화를 개조하기 위한 다차원적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의 권리, 페미니즘에 대한 전 조직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진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하가 맹조직에 여성억압적 문화를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토론을 안착시킴으로써 여성 문제를 일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8. 민주노총,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의 선봉에 서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중운동은 힘관계의 열세로 인해 민주당이나 시민운동 진영과 함께 반MB연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낮은 지지도와 중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 및 대중운동의 사기저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노총, 반MB연합을 넘어서야 한다

반MB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중적인 저항이 조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민주당을 활용하지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수세적 태도는 이른바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회 투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광우병 촛불집회의 열기가 사그라진 후에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는 길은 국회에서 민주당을 활용해서 미디어법, 집시법 등 각종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했던 세력이 민생민주국민회의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한미FTA, 금융자유화, 복지 정책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집권세력에서 의석이 많지 않은 야당으로 추락한 자신의 지위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맞고 있는 대립과 충돌이 격렬해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권력을 둘러싼 당파적 마찰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작은 차이, 큰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추락한 위신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민주당에게, 시민단체와 일부 민중운동의 외곽 지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반면 그 과정에 동참하는 진보정당은 국회에서 민주당에 비해 조금 더 급진적인 주장이나 투쟁을 하는 세력 정도로 비친다. 결국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다시 자초한다.

반MB연합의 또다른 형태는 ‘민주대연합’으로 제기되는 선거연합이다.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의 명망가나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민주당, 진보정당, 시민단체 어느 세력도 한국의 개혁진보 진영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판짜기가 차기 정권교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 반대세력에 대한 노골적 탄압과 도덕적 비난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추구하기보다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의 각종 위원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던 시민단체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소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진보정당의 일부 인사들도 이러한 흐름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집권정당, 통치정당 모델로 설정하면 계급적 기반이나 사회운동보다는 유연한 선거연합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물론 그들 스스로가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입지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연합이 전면적인 수준에서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민주대연합으로 제기되는 외풍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계급적 기반인 노동자운동과 민중운동의 독자성 확보를 경시한다면 토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 민주노총, 민주대연합을 넘어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연대전선의 선봉에 서자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반MB연합의 근거에는 억압적인 보수정권이 등장한 상황에서 과거 집권세력이나 시민단체와의 상층 연대를 통해 활동공간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있다. 그러나 만족될 수 없는 기대 속에서 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상대화되고 있다. 민중운동은 허구적인 반MB연합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자운동의 재건, 민중운동의 독자성 강화, 진보정당의 사회운동적 성격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국진보연대는 전국민중연대 해소를 둘러싼 지난한 논란 끝에 반쪽짜리로 출범한 이후 민중운동 내에서 합력을 창출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시민운동 진영이나 민주당과 협력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정 정파의 경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마다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분란의 소지를 계속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한국진보연대를 넘어 보다 폭넓은 공동투쟁기구를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렇게 결성된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 역시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제를 설정하거나 그에 적합한 투쟁 태세와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반MB공투본

을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는 상설연대체로 발전시키기에는 내부적 합의도 부족하다.

조만간 예상되는 세계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정권의 노동권·생존권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민중운동의 단결의 수준을 한층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시기 노동권·생존권을 중심으로 대중 투쟁 요구를 정선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빈민·청년학생 등 계급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민중운동의 동맹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전국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 근거한 연대운동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서 새로운 상설연대체가 결성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며 소지역별(지구협) 단위에서도 지역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연대운동을 복원하여 지역 정치활동과 미조직사업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9. 활동가조직의 혁신과 소통, 연대의 강화

○ 민주노조운동에서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는 정치세력, 즉 정파(현장조직을 포함한 활동가조직)의 역할을 너무도 중요하다. 정파 없는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은 사고할 수 없다. 현재 정파에 대한 대중적 불신은 정파를 없애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파가 정파다울 때, 즉 정치세력으로서 이념과 노선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제대로 펼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 2009년 3월 민주노총 혁신대토론회에서 보여지 듯 현재 대다수 정파의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재건의 입장은 몇 몇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통의 입장으로 수렴되고 있다. 정파활동이 민주노총 혁신의 걸림돌로 비판받는 이유는 주류 정파의 '계급적 단결을 약화시키는 실리주의적 노선'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정파 내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파의 입장과 정파 구성원들의 실제 실천 활동 간의 커다란 괴리에 있다. '자기방어적 실리주의'와 '패배주의'에 갇혀 있는 현장의 조건, 조합원들의 의식과 문화 속에서 각 정파의 입장이 사실상 조직원들 안에서도 자신의 운동과 실천의 지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 조건 하에서 정파들이 이념과 노선에 근거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기 혁신이 지체되면서 노조 집행 권력을 둘러싼 정파 간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이는 세 가지 지점에서 정파들의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어느 정파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파 내부의 원칙과 기풍의 수립 위한 전면적인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각 정파 혁신세력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객관적 현실, 노동자대중의 의식과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동투쟁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상호 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현장에 걸쳐 실질적인 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신뢰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 조합원 교육의 강화와 지역·현장 일상 활동의 복원

- 현재 노동자대중과 조합원들은 세계적 경제위기 하에서 해고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의 심리가 민주노조운동의 집단적 운동을 통한 승리의 전망을 찾을 수 없는 조건에서 극도의 '자기방어적 실리주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통한 승리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함께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비판,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노조를 통한 단결,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운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동조합 체계를 통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형성하는 학습소모임, 문예소모임의 결성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또한 노동자대중, 조합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장토론과 정치실천을 일상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내에 만연되어 있는 대리주의, 소위 자판기노조라 불리는 활동을 지양하고 조합원을 주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지역 차원의 다양한 정치적 실천을 개발하고 참여토록 해야 한다. 현장 토론을 통해 공동의 요구를 함께 마련하고 간부대의원의 현장토론 조직화, 현장 선전전을 일상화해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주1회 정치캠페인 등을 적극 조직하여 조합원이 구경꾼이 아니라 노조활동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